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18. 10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현안조사-국정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현안조사는 한국리서치 전문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하며,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합니다.
- 국정지표는 해당 조사결과와 함께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박종선 수석부장

전화 | 02-3014-0085
e-mail | have21c@hrc.co.kr

기획조사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국정지표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목 차

CONTENTS

주요 조사결과	4
1. 현안 조사	8
2. 국정 지표	17
3. 조사 개요	26



현안조사 : 부동산 인식 및 정책

-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그 다음으로 포기한 것은 내 집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20~30대(90%)가 40대 이상(8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전체 응답은 86%로 우리나라 10명 중 8명 이상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과연 집을 보유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지더라도 집 보유 인식이 여전히 높을 지 궁금합니다.
- 상황별 주택 보유 인식을 물어본 결과,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40%),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55%)에 주택 보유 인식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과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보유 의식에 이어 시장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집 값은 현재 어느 수준일까요? 비싸다는 응답이 45%, 적당하다는 응답이 31%, 싸다는 응답이 24%입니다.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동산 열풍에 비해 차분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비싸다는 응답이 60%로, 상대적으로 서울 거주민들의 집 값 열풍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집 값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습니다. 집 값이 “오를 것이다”는 응답은 전체 28%인데, 서울(37%), 임차가구(36%)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전통적으로 부동산은 금융과 더불어 자산을 증식시키는 주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상황이 벌어지자 부동산이 투기인지? 투자인지?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조사 결과, “투기”라는 시각과 “투자”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반으로 갈렸습니다. 투기에 가깝다는 응답은 20대, 임차가구에서 높고, 지역별로는 단기간 높은 아파트 수익률로 화제가 되었던 서울,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안조사 : 부동산 인식 및 정책

- “구입가격보다 크게 오른 가격으로 1년 이내 집을 되파는 경우”는 투기에 가깝다는 응답이 75%,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5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주택자인데 1채는 내가 살고, 나머지는 전세를 주는 경우(29%)”, “3주택자인데 나와 내 가족들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11%)”를 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다주택자 모두를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괴리가 느껴지는 결과입니다.
- 부동산이 투자 수단으로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4%로,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써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67%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33%)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원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16%)에 비해 수도권(70%)에 유리하다는 입장과 다주택자(36%)에 비해 1주택자(50%)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집을 가진 사람(44%)과 집이 없는 사람(43%)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 부동산 정책 중 대표적인 보유세 인상 정책, 공급 확대 정책, 금융 규제 정책 모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정책은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 추첨제 공급 시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응답은 89% 입니다. 해당 정책의 실 수혜자로 볼 수 있는 40대 이하, 임차, 무상 가구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정지표 :

대통령 국정운영과 리더십평가, 정책 평가, 경제/안보인식

-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전월(55%) 대비 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6월부터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달 반등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컸습니다.
- 리더십 평가에서도 6가지 항목(원칙과 소신, 소통, 민생 안정, 위기상황 대처, 통합 노력, 공직 인사) 모두 긍정적 평가가 상승하였습니다. 6월을 기점으로 모든 차원에서 긍정평가 하락세가 지속되었지만 이번 달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 주요 10개 정책 각각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대북 정책’의 긍정 평가가 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교 정책’(67%), ‘보건 의료 정책’(61%), ‘사회 안전 대책’(54%), ‘복지 및 분배 정책’(53%), ‘환경 정책’(47%), ‘교육정책’(38%), ‘주거 및 부동산 정책’(31%), ‘저출산, 고령화 대책’(31%), ‘일자리 및 고용 정책’(30%)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달 대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긍정평가 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 경제인식지수는 -37로 지난 달(-42) 대비 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지역별로는 서울, 직업별로는 학생에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올해 5월 이후 경제인식지수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번 달에 상승하였습니다.
- 국가안보 지수는 +29로 지난 달(+21) 대비 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6월 이후 안보인식지수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번 달에 상승하였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현안조사
부동산 인식 및 정책

01

현안조사

1) N포 세대에서 포기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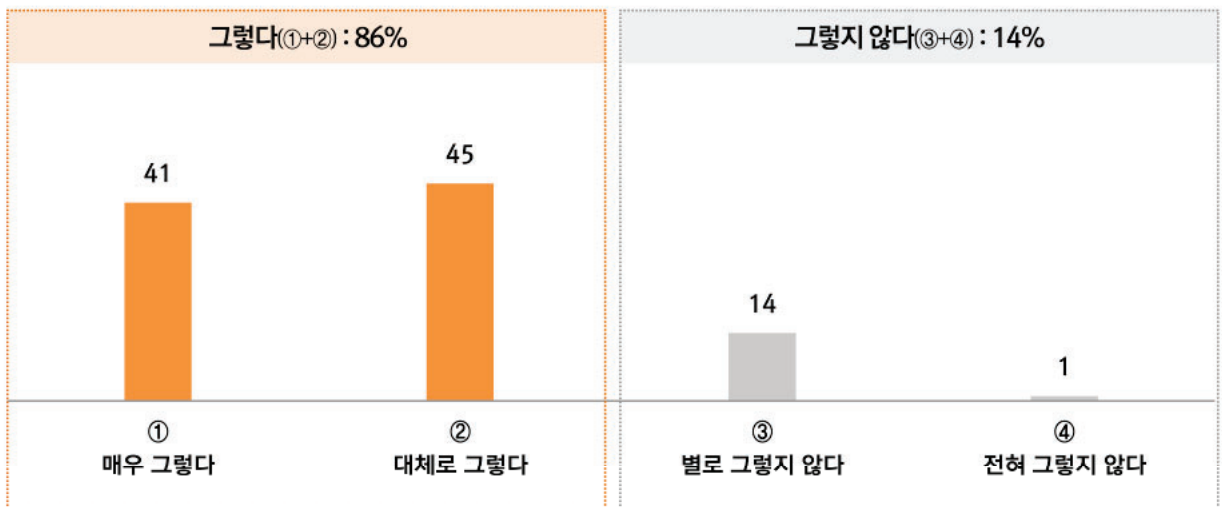
20~30대의
주택 소유 인식이 더 높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86%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그 다음으로 포기한 것은 내 집 마련이다. 그러나 40대 이상보다 20~30대가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은 86%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Q 귀하께서는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전체	(1,000)	41	45	86	14	1	14	100
연령								
19~29세	(175)	54	36	90	9	1	10	100
30~39세	(173)	45	43	88	10	1	12	100
40~49세	(203)	36	47	83	16	1	17	100
50~59세	(201)	34	48	81	19	0	19	100
60세	(248)	38	47	86	13	1	1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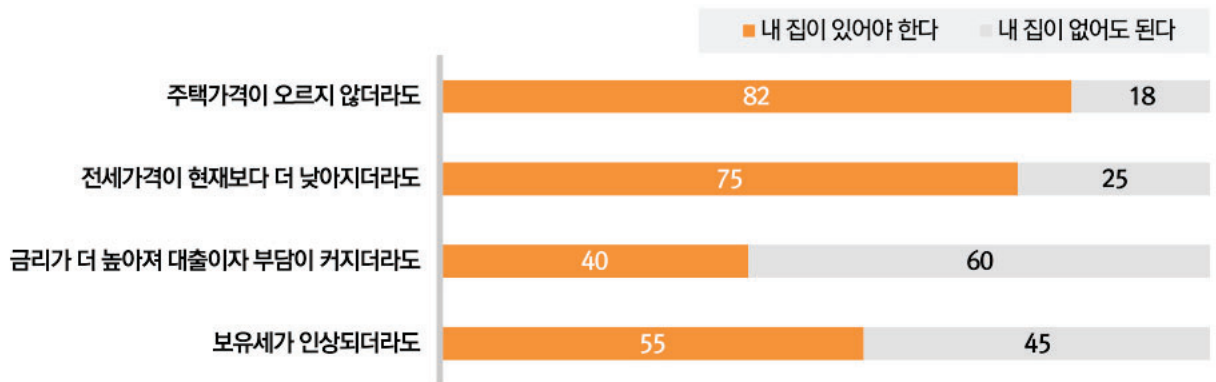
상황별 주택 보유 인식

대출이자나 보유세 등의 부담이 커질 경우 주택 보유 인식은 낮아져

집을 보유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지더라도 집 보유 인식은 여전히 80% 이상일지 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비율은 82%로 높다. 주택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는 주택 보유 인식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전세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75%로 보유인식이 약간 줄어들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20대(70%), 1인가구(69%), 임차가구(64%)에서 줄어드는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집 보유 인식은 절반가량인 40%로 대폭 줄어들었다.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도 주택 보유 인식은 55%로 줄어들었다.

지금 당장 부과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임차 가구의 경우 집을 사고 난 후 부담해야 할 비용들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전세가격이 낮아지더라도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Base=전체	사례수 (명)	내 집이 있어야 한다	내 집이 없어도 된다	내 집이 있어야 한다	내 집이 없어도 된다	내 집이 있어야 한다	내 집이 없어도 된다	내 집이 있어야 한다	내 집이 없어도 된다
전체	1,000	82	18	75	25	40	60	55	45
연령									
19-29세	175	85	15	70	30	41	59	58	42
30-39세	173	85	15	78	22	39	61	56	44
40-49세	203	80	20	75	25	38	62	51	49
50-59세	201	79	21	72	28	43	57	57	43
60세 이상	248	83	17	79	21	39	61	55	45
가구원수									
1명	106	78	22	69	31	36	64	51	49
2명	271	80	20	76	24	37	63	54	46
3명	258	86	14	74	26	40	60	57	43
4명 이상	365	82	18	76	24	44	56	55	45
주택점유형태									
자가	627	89	11	81	19	46	54	62	38
임차	350	72	28	64	36	31	69	43	57
무상	23	64	36	73	27	23	77	42	58

01

현안조사

2) 미친 집 값, 우리 동네 집 값은?

현재 우리 동네 집 값은
비싸다 45%,
적당하다 31%

3개월 후
변화가 없을 것이다(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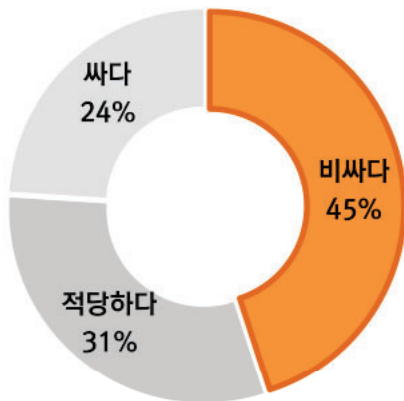
집 값에 “미친”이란 수식어가 붙어 이젠 고유 명사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 동네 집 값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비싸다는 응답이 45%, 적당하다는 응답이 31%, 싸다는 응답이 24%로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부동산 열풍에 비해 차분한 결과이다. 그러나 서울은 비싸다는 응답이 60%로, 서울 거주민들의 집 값 열풍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집 값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다. 집 값이 “오를 것이다”는 응답은 전체 28%인데, 서울(37%), 임차가구(36%)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Q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지역의 현재 집 값은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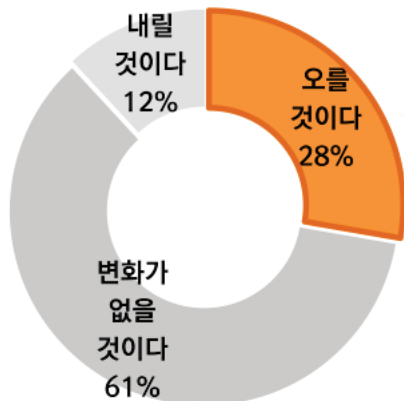
(N=1,000, %)



지역	서울(195)	60%
	인천/경기(300)	40%
	대전/세종/충청(105)	43%
	광주/전라(102)	40%
	대구/경북(102)	38%
	부산/울산/경남(155)	41%
	강원/제주(41)	63%
점유 형태	자가(627)	36%
	임차(350)	62%
	무상(23)	40%

Q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지역의 집 값은 3개월 후에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지역	서울(195)	37
	인천/경기(300)	30
	대전/세종/충청(105)	22
	광주/전라(102)	29
	대구/경북(102)	23
	부산/울산/경남(155)	18
	강원/제주(41)	29
점유 형태	자가(627)	24
	임차(350)	36
	무상(23)	14

01

현안조사

3) 부동산은 투자인가? 투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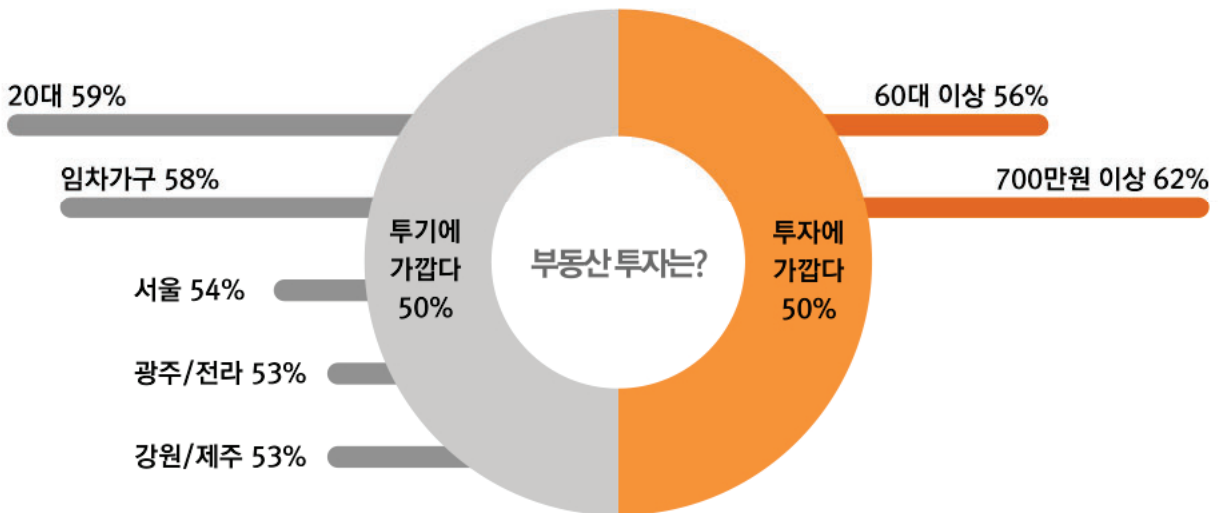
부동산의
투기vs 투자인식은
50:50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최근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온다.

통계청에서 6월에 발표한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국민 순 자산 중 토지, 건물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4%로 부동산 공화국다운 통계이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투기”라는 시각과 “투자”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반으로 갈렸다. “투자에 가깝다”는 응답은 60대 이상, 월평균 가구 소득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투기에 가깝다”는 응답은 20대, 임차가구에서 높고, 지역별로는 단기간 높은 아파트 수익률로 화제가 되었던 서울,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Q 재테크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주식,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부동산이 투자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투기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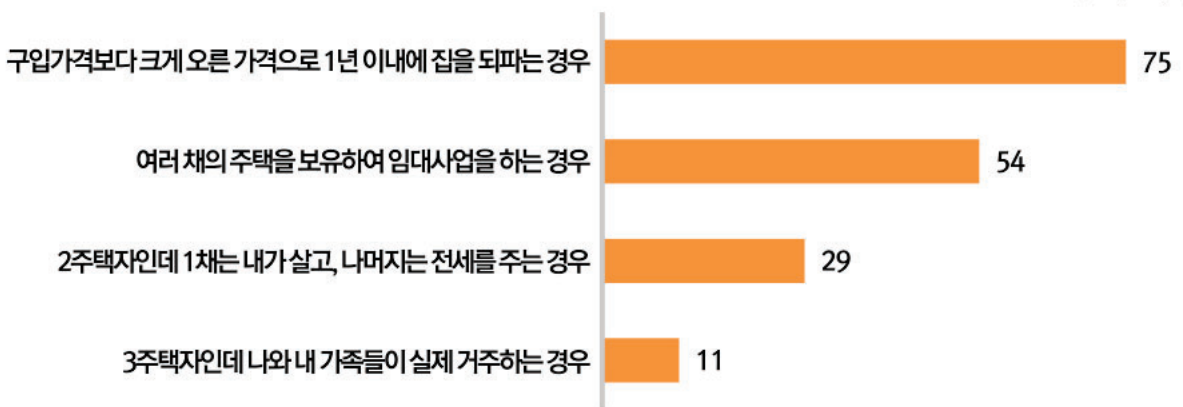
다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 정책의 괴리

투기로 생각되는 상황으로는 “구입가격보다 크게 오른 가격으로 1년 이내 집을 되파는 경우”가 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54%이다.

반면, 2주택자인데 1채는 내가 살고 나머지는 전세를 주는 경우(29%)”, “3주택자인데 나와 내 가족들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11%)”는 투기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주택 보유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다주택자 모두를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괴리가 느껴지는 결과이다.

Q 귀하께서는 다음 아래 주택 보유 상황 중 투기로 생각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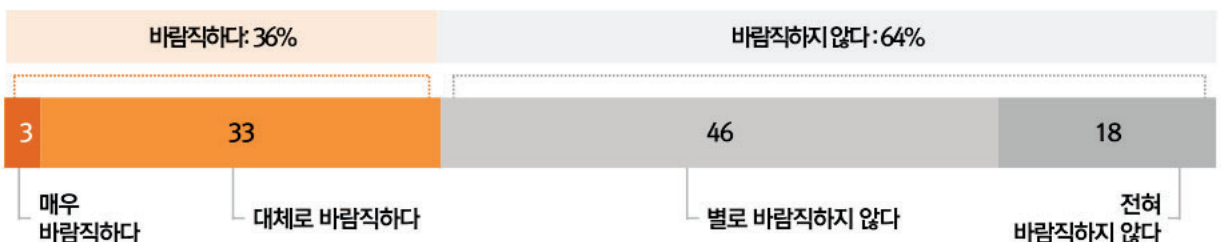
투자의 수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64%

부동산이 투자 수단 자체로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부동산이 투자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4% 이고,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6%이다.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써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Q 부동산이 투자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01

현안조사

4)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지지
67%**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67%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30대(75%), 임차가구(75%), 진보성향자(79%)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Q 귀하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입장에 더 가까우십니까?

(N=1,000, %)



**수도권, 1주택자에게
유리하다 과반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원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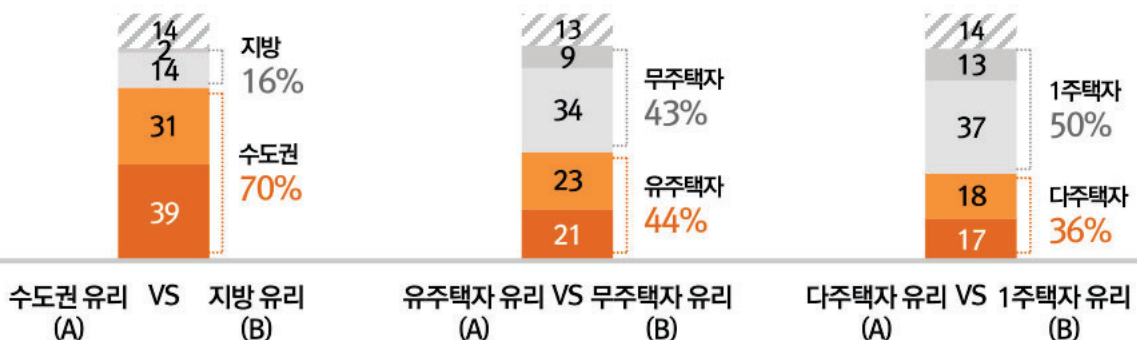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16%)에 비해 수도권(70%)에 유리하다는 입장과 다주택자(36%)에 비해 1주택자(50%)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집을 가진 사람(44%)과 집이 없는 사람(43%) 각각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은 비슷한 수준이다.

Q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음 각각의 진술 중 귀하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N=1,000, %)

■ A에 매우 가깝다 ■ A에 대체로 가깝다 ■ B에 대체로 가깝다 ■ B에 매우 가깝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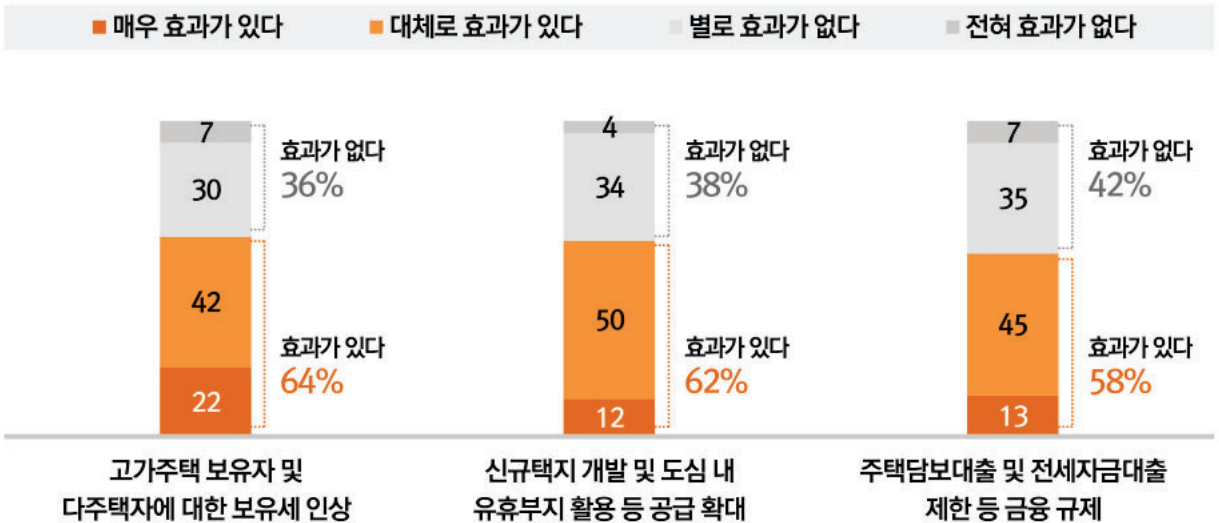
보유세 인상 정책 효과 가장 높게 평가

부동산 정책 중 대표적인 보유세 인상 정책, 공급 확대 정책, 금융 규제 정책 모두 효과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그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정책이 64%로 가장 높았다. “신규택지 개발 및 도심 내 유희부지 활용 등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2%, “주택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금융 규제”는 58%이다.

Q 집값이나 부동산을 안정시키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무주택자 우선 공급 정책 찬성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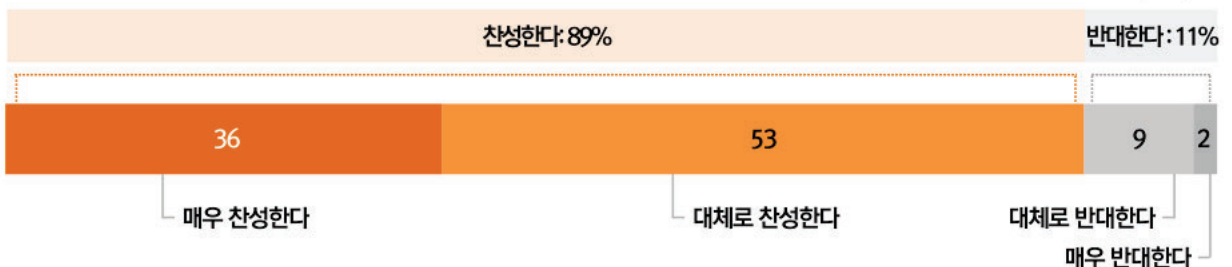
실 수혜자인 40대 이하,
임차, 무상 가구에서
찬성 비율이 높아

정부는 10월 추첨제 공급 시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해당정책에 대해 찬성 응답은 89%로, 긍정적인 여론이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해당 정책의 실 수혜자로 볼 수 있는 40대 이하, 임차와 무상 가구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Q 국토교통부는 청약과열 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입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위 정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N=1,000, %)



여론 속의

여輿論論

CHAPTER

02

국정지표

02

국정지표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6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2%는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32%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달 대비 7%포인트(55% → 62%) 상승하였다. 6월부터 지속된 하락세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대비 7%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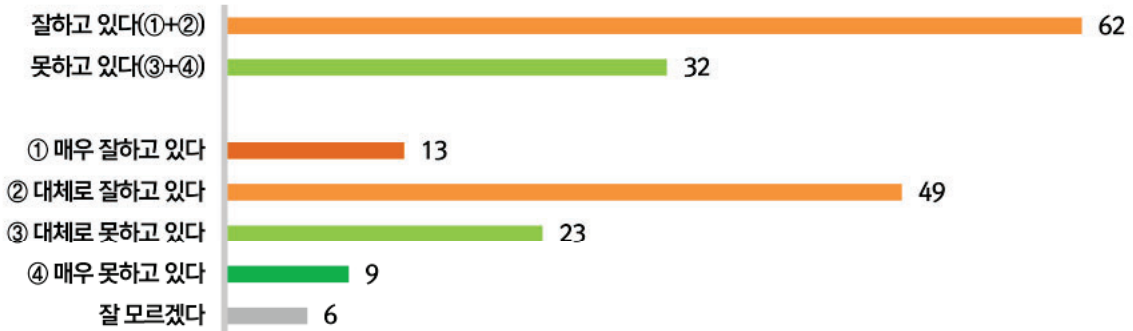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20대 62%, 30대 72%, 40대 72%, 50대 60%, 60세 이상 50%이며, 60세 이상에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 68%, 인천/경기 63%, 대전/세종/충청 55%, 광주/전라 78%, 대구/경북 45%, 부산/울산/경남 62%이며, 지난달 대비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81%, 중도 64%, 보수 37%로 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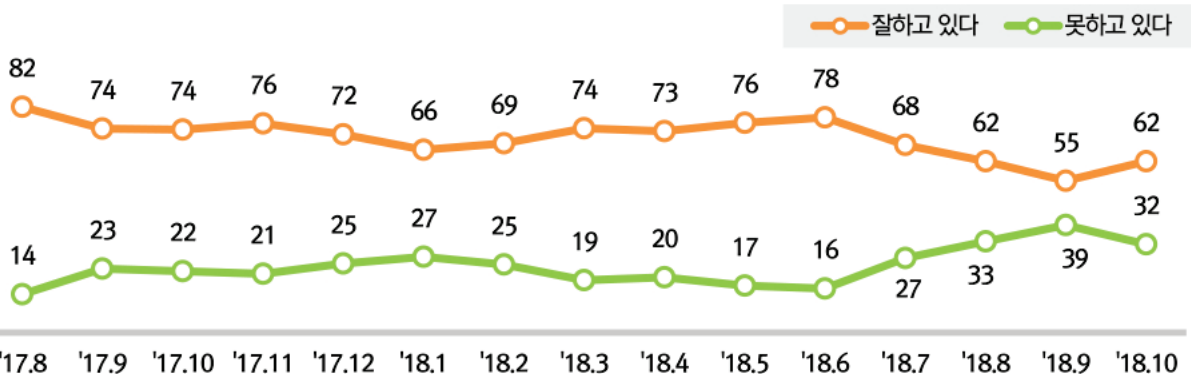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62%, 못하고 있다 32%

(N=1,000, %)



지난달 대비 7%포인트 상승

(N=1,000, %)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

지난달 대비 60세 이상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 %p)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전월 대비
전체	66	69	74	73	76	78	68	62	55	62	+7
19-29세	67	74	73	78	81	80	70	65	57	62	+5
30-39세	77	81	81	87	85	85	72	68	63	72	+9
40-49세	78	77	88	82	83	87	76	71	65	72	+7
50-59세	66	71	76	70	80	72	68	64	58	60	+2
60세 이상	48	47	58	56	59	70	55	48	39	50	+11

지난달 대비 부산/울산/경남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 %p)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전월 대비
전체	66	69	74	73	76	78	68	62	55	62	+7
서울	60	68	74	69	76	78	69	57	57	68	+11
인천/경기	68	71	76	77	79	79	69	67	53	63	+10
대전/세종/충청	72	66	73	73	74	74	67	56	52	55	+3
광주/전라	84	85	90	87	91	91	86	84	83	78	-5
대구/경북	60	62	59	60	62	69	50	50	47	45	-2
부산/울산/경남	62	59	71	71	76	77	62	57	50	62	+12

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 %p)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전월 대비
전체	66	69	74	73	76	78	68	62	55	62	+7
진보	88	88	93	93	94	95	93	87	81	81	0
중도	70	73	74	73	81	76	69	55	53	64	+11
보수	41	47	51	48	50	59	36	41	31	37	+6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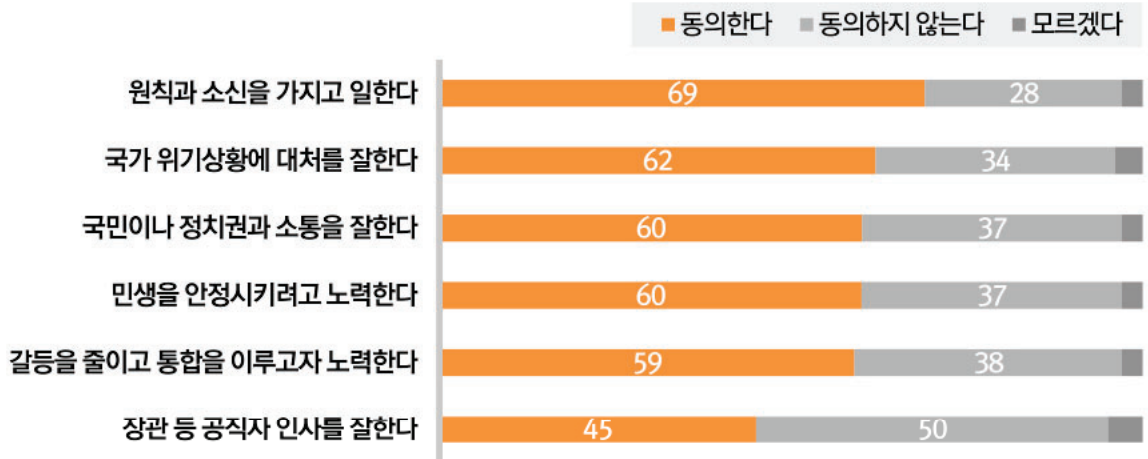
국정지표
2) 대통령 리더십 평가리더십 관련 모든 차원에서
지난달 대비 상승

대통령 리더십을 6가지 차원으로 각각 평가하게 한 결과, 원칙과 소신에 대한 긍정평가가 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위기상황대처(62%), 소통(60%), 민생 안정(60%), 통합 노력(59%), 공직인사(45%) 순이었다.

리더십 차원별 평가 추이를 보면, 지난달 대비 모든 부문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상승하였다. 6월을 기점으로 모든 차원에서 지속된 하락세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원칙과 소신에 대한 평가 가장 높고, 공직 인사 평가 가장 낮아

(N=1,000, %)



지난달 대비 모든 부문에서 긍정평가 비율 상승

(N=1,000, 동의한다%, %p)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전월 대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	72	72	78	74	78	81	75	70	64	69	+5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를 잘한다	59	62	70	71	73	73	65	60	58	62	+4
국민이나 정치권과 소통을 잘한다	69	68	72	71	72	74	67	64	58	60	+2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73	69	71	73	71	69	66	63	58	60	+2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62	62	66	68	67	68	64	61	55	59	+4
장관 등 공직자 인사를 잘한다	52	51	57	51	55	59	52	48	42	45	+3

02

국정지표
3) 정책 평가

대북 정책이 가장 높고,

주요 10개 정책별로 실행에 대한 평가(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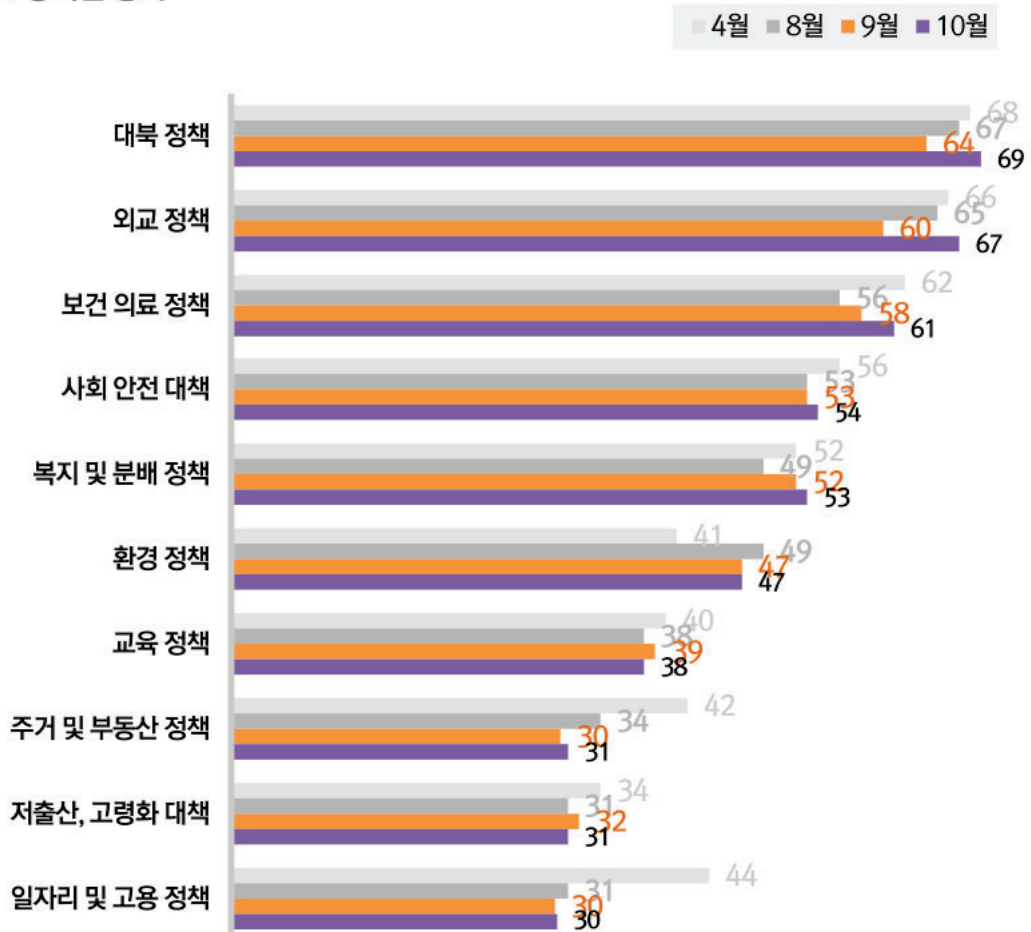
일자리 고용 정책이
가장 낮아

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정책은 '대북 정책'(69%)이었고, 다음으로 '외교 정책'(67%), '보건 의료 정책'(61%), '사회 안전 대책'(54%), '복지 및 분배 정책'(53%), '환경 정책'(47%), '교육 정책'(38%), '주거 및 부동산 정책'(31%), '저출산, 고령화 대책'(31%), '일자리 및 고용 정책'(30%) 등의 순이었다.

지난 달 대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긍정평가 비율이 상승하였다.

10개 주요 정책별 평가

(N=1,000, 잘하고 있다%)



02

국정지표
4) 국가 경제 인식국가경제인식지수
-37지난달 대비
5포인트 상승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하였으며, 이는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인덱스(Gallup's U.S. Economic Confidence Index)를 참고하였다.

국가 경제 인식 지수는 -37로 지난달(-42) 대비 5포인트 상승하였다. 5월 이후 하락세였던 경제 인식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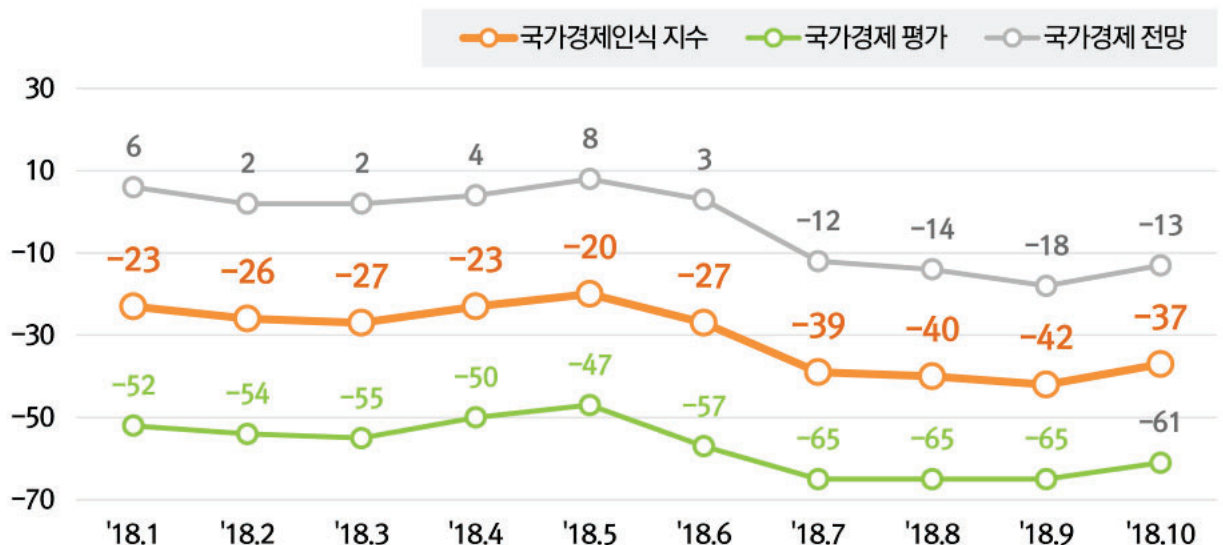
경제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경제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6%	26%	67%	1%	100%	-61(A)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26%	34%	39%	2%	100%	-13(B)
국가경제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37

국가경제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5포인트 상승

(N=1,000, 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직업별 국가 '경제'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40대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27	-39	-40	-42	-37	+5
19-29세	-25	-16	-20	-16	-20	-27	-26	-39	-35	-29	+6
30-39세	-12	-20	-17	-8	-9	-19	-33	-30	-34	-27	+7
40-49세	-12	-13	-16	-23	-7	-11	-34	-32	-34	-22	+12
50-59세	-26	-29	-30	-30	-20	-36	-44	-43	-40	-47	-7
60세 이상	-36	-46	-45	-34	-40	-40	-52	-53	-59	-54	+5

지난달 대비 서울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27	-39	-40	-42	-37	+5
서울	-25	-25	-28	-28	-17	-35	-35	-48	-46	-33	+13
인천/경기	-25	-27	-22	-20	-20	-26	-39	-34	-41	-37	+4
대전/세종/충청	-22	-31	-23	-22	-30	-18	-35	-41	-35	-38	-3
광주/전라	-4	-7	2	-1	+3	+3	-15	-20	-13	-16	-3
대구/경북	-32	-31	-49	-38	-33	-38	-50	-58	-55	-53	+2
부산/울산/경남	-22	-31	-44	-27	-23	-39	-54	-46	-49	-43	+6

지난달 대비 학생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27	-39	-40	-42	-37	+5
자영업	-31	-35	-37	-41	-37	-32	-51	-49	-62	-47	+15
판매/영업/서비스	-24	-16	-23	-21	-13	-38	-32	-38	-35	-19	+16
생산/기능/노무	-13	-22	-12	-22	-13	-16	-39	-31	-33	-34	-1
사무/관리/전문	-19	-22	-15	-6	-13	-21	-38	-39	-33	-34	-1
주부	-32	-35	-31	-29	-24	-35	-45	-45	-49	-39	+10
학생	-10	-11	-30	-26	-21	-31	-34	-40	-50	-25	+25
무직/퇴직/기타	-19	-27	-35	-26	-20	-22	-31	-39	-41	-44	-3

02

국정지표
5) 국가 안보 인식국가안보 인식지수
+29

경제인식 인덱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했다.

지난달 대비
8포인트 상승

국가 안보 인식 지수는 +29로 지난달(+21) 대비 8포인트 상승하였다. 6월 이후 하락세였던 안보 인식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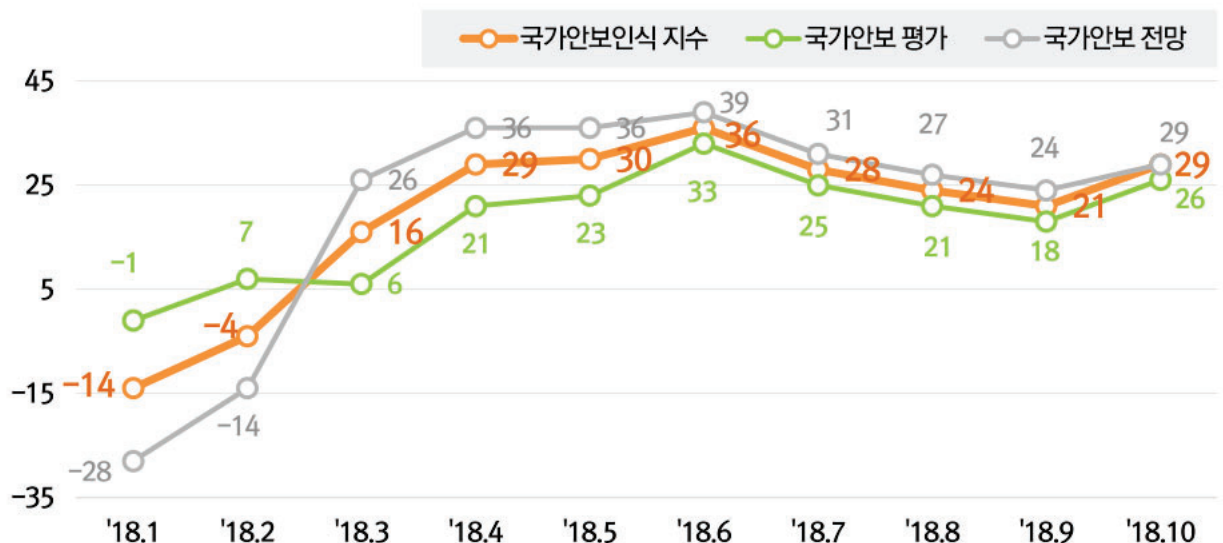
안보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안보상황 평가	좋다 (a)	중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45%	34%	19%	2%	100%	+26(A)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49%	30%	17%	3%	100%	+32(B)
국가안보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29

국가안보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4포인트 하락

(N=1,000, 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가 '안보'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30대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36	+28	+24	+21	+29	+8
19~29세	-8	+10	+18	+35	+30	+28	+36	+28	+18	+24	+6
30~39세	+2	+9	+25	+35	+38	+33	+39	+28	+24	+37	+13
40~49세	+3	+10	+36	+36	+43	+58	+46	+41	+39	+50	+11
50~59세	-18	-1	+18	+29	+34	+40	+26	+27	+30	+31	+1
60세 이상	-42	-37	-9	+15	+10	+23	+1	+2	-1	+8	+7

지난달 대비 인천/경기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36	+28	+24	+21	+29	+8
서울	-24	-10	+15	+29	+31	+34	+33	+21	+22	+33	+11
인천/경기	-14	-3	+23	+35	+31	+38	+28	+29	+22	+34	+12
대전/세종/충청	-11	-13	+20	+24	+25	+35	+36	+18	+24	+18	-6
광주/전라	+8	+24	+42	+49	+60	+54	+52	+47	+51	+57	+6
대구/경북	-29	-5	-15	+8	+10	+20	+5	+12	+5	+9	+4
부산/울산/경남	-11	-9	+4	+23	+30	+33	+14	+19	+12	+19	+7

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36	+28	+24	+21	+29	+8
진보	+16	+28	+51	+63	+63	+71	+70	+62	+62	+65	+3
중도	-10	-6	+11	+22	+32	+29	+27	+15	+15	+27	+12
보수	-52	-36	-20	-7	-11	-1	-20	-10	-18	-11	+7

담당자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3

조사개요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MS 패널(2018년 8월 기준 약 43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8년 1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메일 발송 9,108명, 조사참여 1,417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자 대비 11.0%, 참여자 대비 70.6%, 유효 참여자 대비 80.8%)
조사일시	• 2018년 10월 20일~23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